

누구의, 무엇을 위한 공정성인가?

류 동 민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요약 ■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절차적 공정성과 구조적 공정성 간의 대립구도 속에 공적 담론과 사적 이익의 괴리, 세대 간 의식의 간극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공정성 논의는 넓게 잡아도 상위 10퍼센트 계층의 물질적 이익과 관심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하위 계층의 문제에 집중할 때, 공정성 논의는 비로소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본 연구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훗불 혁명”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토마 피케티가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제시한 “상인 우파”와 “브라만 좌파”의 적대적 공존, 그에 따른 불평등 심화와 민주주의의 쇠퇴는 한국 사회의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지속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중간층과 상위층 사이의 자산 격차를 확대했고 세대 간 부의 이전문제와 연결되면서 연전의 유행어인 “n포 세대”의 절망을 다시금 불러냈다. 압축성장의 집단적 기억을 간직한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능력주의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능력주의 자체에 의문을 나타내는 공적 담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같은 속류 능력주의적 사고가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뜻밖의 소구력을 발휘하는 듯이 보인다.

대학입시 전형방식을 둘러싼 논쟁

한국사회에서 능력주의, 공정성, 세대 간 경쟁 등의 키워드가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대학 입시일 것이다. 한국인들의 대학입시에 관한 일종의 이데아는 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하여, ② 정답이 명확한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③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③은 지향해야 할 목표, ②는 목표달성과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①은 게임을 설계할 때 지켜져야 할 구조적 공정성의 문제이다.

③의 목표를 개인적 차원(입신양명)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글자 그대로 좋은 교육)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들은 ②가 철저히 지켜지는 것은 오히려 ③을 실제적으로 저해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수능성적을 느슨한 등급으로만 구분하자거나 아예 자격고사 정도로만 바꾸자는 주장은 ②를 공격하고 있다. 문제는 ①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②를 무력화하면 공정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건들 중에서 어느 한두 가지를 개선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 년에 한 번 전국단위로 치르는 시

험의 성적에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요컨대 ①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험생 본인의 업적에 일상적으로 타인이 개입할 가능성을 허용¹⁾하는 수시 전형이 우월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더구나 ①이 해결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②에서 ③(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정의된다)으로 가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낫다는 현실주의에 비해서도 오히려 대중적 설득력은 떨어진다.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대학입시가 가족 단위의 생존경쟁으로 확장된 현실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가족의 능력을 차단하고 수험생 본인의 능력만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임이라는 집단적 환상이 유지된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 논의와 세대 담론

이제 대학입시를 벗어나 일반적인 공정성 논의로 넘어와 보자.

한편에 세대 담론은 계급이나 계층 문제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거나 적어도 그것을 지워버리는 위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 반대편에는 청년세대의 능력주의 지향이 기존 거대담론 중심의 공정성 제고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은 반작용이라 주장하는 논의가 있다. 진보연하는 기성세대로서는 딱히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적극적 우대조치들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격렬한 반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나 2018년 평창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논란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앞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①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②와 ③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²⁾에 대한 요구로

1) 이른바 명문 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일수록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 활동내역 등을 과장하거나 심지어는 맞춤형으로 대필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업계의 비밀이다. 심각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예컨대 부모가 지닌 문화자본의 격차를 통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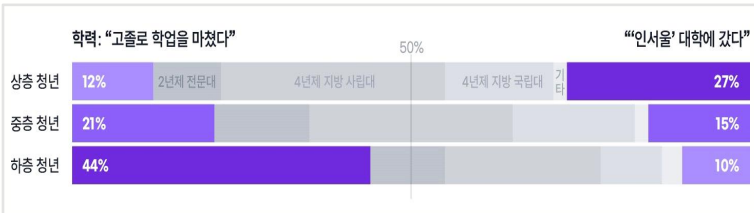
2) 박민영, 『20대 남자, 그들이 몰려온다』, 아마존북스, 2021년, p.186.

나타난 것이다. 필자는 최근 공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³⁾ 놀랍게도 응답자들은 양성 평등채용이나 지역할당제, 기본소득 등에 대해 본인이 그 잠재적 수혜대상인 경우에조차 지극히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간극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더구나 정파적 입장이 개입할 때, 공정성 논의는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겉돌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

프로젝트 alookso는 “학창시절 공부방이 있었는가”라는 간단한 질문에 따라 청년의 계층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공부방 계급론”을 제시하였다. <그림>은 이 조사결과 중의 하나를 보여준다. 하층 청년의 대학진학률은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더구나 이른바 “인서울” 대학진학률은 상층 청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층 청년의 절반 가량이 최소한 4년제 지방국립대에 진학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그림> 계층과 학력의 관계



출처: 프로젝트 alookso, 계급이 돌아왔다-이대남 현상이라는 착시, 2021년, <https://alook.so/posts/XBteej> (검색일: 2022년 4월 20일)

간단한 그림 하나로 많은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 결과는 공정성 논란에서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것, 도대체 공정성은 누구의, 무엇을 위한 공정성이어야 할 것

3) 이 인터뷰는 인천대 경제학과 이명헌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KDI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인지를 생각해보도록 만든다.

실제로 공정성 문제로 제기된 사회적 이슈들은 넓게 잡아도 상위 10%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들이다.⁴⁾ 대학입시에서 정시/수시 논쟁은 현실적으로는 이들 계층 밖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상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까닭 중의 하나도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상위 10%-20%의 문제이기 때문이다.⁵⁾ 인국공 사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계층은 적어도 그 정도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정규직 입사를 꿈꿀 수 있는 학력(혹은 학벌)을 갖춘 계층, 거칠게 말하자면 대학졸업자 중에서 상위 10% 미만일 것이다. 참고로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 논란을 촉발했던, 그리고 다시 소환되고 있는 의과 대학 입학의 공정성은 상위 1% 미만의 문제이다.

기본 역량의 확대

실제로 2020년 기준 대학진학률은 7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 이는 뒤집어 말하면 3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는 이들 계층이 겪는 공정성 문제는 사회적 이슈 거리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상위 10% 안에서의 공정성이 개선된다고 해서 하위 90%의 공정성,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공정성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상위 1%(혹은 10%)의 공정성 문제와 하위 50%(혹은 하위

4) 공교롭게도 “인서울대학”의 정원은 전체 수능 응시자의 10%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른바 상위 10여개 종합대학의 정원은 6-7%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5) 마이클 셴델이나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는 추첨 입학제는 자격고사를 통과한 수험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도록 하자는 제도이다. 만약 “인서울대학”의 정원이 전체 수험생의 5%하면, 예컨대 수능성적이 상위 20% 정도인 학생들에게 지원자격을 주고 합격 여부는 추첨으로 결정하는 셈이다. 이것은 국립대 네트워크처럼 일정한 범위 안에서 경쟁을 완화하고 학벌 취득으로 인한 렌트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강조하는 하위 50% 이하의 계층은 여전히 소외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10%)의 공정성 문제가 따로 있는 셈이라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자보다는 후자여야 한다. 절차적 공정성에 맞서 구조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허망한 공론, 혹은 “의식 없는 청년세대” 담론으로 왜소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선거 국면에서 잠시 등장했다 사라진 정책제안들, 이를테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적어도 대학재학생이 받는 만큼의 재정지원을 통해 평생교육이나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 역량을 개인의 타고난 속성, 즉 competence 개념이 아니라, 아마티아 센(A. K. Sen)이 강조한 바, 한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공정성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들의 역량을 끌어 올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SIES**

| 약력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한국사회경제학회 부회장이다.